

예산 보따리 들고 광주 온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당 호남발전특위 성과보고회 역대 최대규모 국비 성과 공유 “호남에 대한 특별한 보상 지속”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10일 광주에서 성과보고회를 열고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 성과와 신규 사업 반영 현황을 공유했다.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성과보고회에는 정청래 당대표, 서삼석 호남발전특별위 위원장, 이병훈 상임수석부위원장, 이원택·김성 수석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정에 정책위 의장은 보고자로 나서 “광주 3조9,500억원, 전남 10조원 등 내년 국비 예산은 수도권 1극 체제 탈피를 위한 첫걸음이자 AI·우주·미래차 등 미래전략산업 중심의 성장 중추를 심는 예산”이라며 “시작일 뿐, 2027년에는 더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의 경우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국회 증액 618억), 국가 AI데이터센터 고도화(192억), AX실증밸리 R&D(정부 증액 170억, 국회 31억), AI 영재고 설립(31억), 광주송정~순천 전철화(정부 1,672억, 국회 50억), 광주 탄약고 이전(정부 15억, 국회 35

억),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7억),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활용(4억4,000만원) 등을 대표적 성과로 들었다.

전남은 무안 농업 AX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국회 증액 23억), AI 생육지원 데이터센터(30억), 민간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20억),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정부 1,703억, 국회 637억), 광주~목포 호남고속철 2단계(정부 816억, 국회 200억), KTX-정릉 호남고속선 증편 위한 변전소 용량 증설(100억), 신안 갯벌박물관 리모델링(21억) 등을 예로 들었다.

정청래 대표는 “예산 증액과 신규 사업 반영은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호남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삼석 위원장은 ‘특별한 보상’에 연신 “감사”를 표한 뒤 “오늘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토대로 더 큰 과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정부 예산에서 누락된 호남 예산을 당대표가 5차례나 회의를 주재하며 직접 챙긴 것은 역대 없었던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 내에 호남은 오랜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RE100 산단이나 반도체 기



동구목재문화센터 개관

강기정 광주시장이 10일 동명동 동구목재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동구목재문화센터는 주민 누구나 일상에서 생활 목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됐다. 광주시 제공

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기대 이상의 예산 확보에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강 시장은 신규사업이 56건에 달하는 점을 들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평가했고, 김 지사는 삭감됐던 SOC 예산이 대거 복원된 것에 감사를 표한 뒤 “국민주권 정부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황애란 기자

광주시의회, ACC 실개천·특별광역연합 예산 칼질

7조6천억 내년 본예산의 결결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7조6,809억원 규모의 2026년도 광주시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세출 기준 36건 57억9,000여만원을 증액하고, 55건 58억8,000여만원을 감액했다.

예결위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실개천 조성사업은 문화전당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국고보조금(유출 저하수 활용 실개천 조성) 13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예산(15억원)은 전남도에서 규약안 조례조자 통과되지 않아 출범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 의견이 나왔으나 “불씨를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5억원만 감액됐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6개 근린공원 개선사업 시민참여예산은 상징적으로 가장 금액이 큰 월산근린공원 휴게쉼터 조성 예산만 2억원 감액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활시켰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한 단체를 지원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부 지원 예산 2건(총

4,500만원)은 전액 삭감했다.

시비 감액으로 관련 단체의 반발이 있었던 아동청소년 그룹홈 지원 예산은 부활이 논의됐으나 집행부가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증액이 무산됐고, 공유자전거 타량계 예산도 일부 감액됐다.

증액된 주요 예산은 신용근린공원 조성 시설계획, 고려인 주민 광주 정착 지원,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 고싸움놀이 공개행사, 지역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 등이다.

예산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황애란 기자

김영록 지사 “인권 도정 최우선...차별없는 사회 구현”

세계인권선언 77주년 메시지

김영록 전남지사는 10일 “인권을 도정 최우선 가치로 세우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는, 모두의 존엄이 빛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세계인권선언 77주년 기념 메시지를 통해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함을 확인한 역사적 선언

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인권 기본 조례’ 제정, 전담부서 설치 등 인권행정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 최근 동부권과 서부권에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이주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찾아가는 도민인권보호관, 도민명예안전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인권보호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세계인권선언 정신은 사람을 하늘로 여긴 인내 전 사상과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대동세

상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며 “나의 존엄 만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는 인권 감수성을 일상에서 실천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발생한 나주 지게차 사건 등 인권 취약지대 개선을 위해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인권침해 발생 시 즉각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정근산 기자

이철 도의원 “완도 미역·매생이 집단 고사, 특단 대책을”

어가 피해보상 등 촉구

집단 고사 피해가 심각한 완도 미역·매생이 어가 보호를 위한 특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 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은 전날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도 앞바다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미역·매생이 집단 고사 사태에 대한 전남도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완도에서는 식용 미역과 전복 먹이용 미역을 가리지 않고 업체 탈락



과 고사 현상이 확산되고 있고, 일부 어장에서는 90%에 달하는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약산도 인근매생이 양식장에서도 피해가 발생해 해양수산과학원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전수조사가 늦어지고 조기 경보 체계 부재 등 전문적인 관측·점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어민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사태 발생 이후에야 조사에 착수한

것은 전형적인 사후행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양환경 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 △전원 모니터링·조기 경보 체계 정비 △장기 대응 전략 마련 △피해 어가 실질 보상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금 바다가 보내는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그 피해는 어민을 넘어 지역 전체의 산업 기반과 미래 세대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조사가 향후 재발 방지의 기초가 되고, 어민들이 다시 안심하고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전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이광일 도의원 “2차 공공기관 이전 동부권 포함해야”

도내 지역간 불균형 해소 혁신도시법 준수 등 촉구

전남 동부권에 해양·수산·환경·물류 중심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환경위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은 전날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와 전남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 전남 동부권을 적극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1차와 마찬가지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 움직임은 전남 동부권 소외를 반복할 것”이라며 “전남 내부에서도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서 지역간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도시법’에도 지역 특성과 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개별 이전 허용 원칙이 명시돼 있다”며 “해양·수산·

산업·환경·물류가 집약된 동부권이 정부가 이전을 검토 중인 기관들의 기능과 가장 높은 적합성을 가진 지역이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전남 동부권의 전략적 가치와 산업·지리적 필요성을 외면한 이전 논의는 국가 정책의 목적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전남의 균형적 발전과 동부권의 공정한 발전 기회 확보, 지역 특성에 맞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반드시 전남 동부권이 이전 대상지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농심

자연정수기간
40
YEARS

자연에서 40년을 거르고 걸러
신선하고 건강해진 백산수

좋은 물은 오래 걸립니다

천지차이
백산수